

융·복합 기업을 막는 지식산업센터 입지 규제 개선

 추진부서 | 안양시 정책기획과 ☎ 031-8045-2211

개선배경



- 2018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던 기업을 발견. 동 기업은 자사의 IoT 기술을 타사 제품에 응용하는 융복합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제조기업임.
- 그런데 산업집적법령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자사 생산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음. 즉, 자사의 기술과 타사 제품을 융합한 '융복합제품'은 판매할 수 없는 상황임.
- 따라서 기업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지식산업센터에서 퇴거하든지, 추가로 자금을 들여서 판매장으로 이용할 별도의 사업장을 얻는 것 뿐으로, 영세한 중소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.
- 이는 빠른 산업환경의 변화를 포용하지 못한 입지규제라고 판단하게 됨.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을 기존 제품에 접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'융·복합'의 심화이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 수없이 많은 융·복합 기술이 창조될 것이기 때문임.

개선내용



개선 전

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융·복합 제품 판매가 불가함에 따른 기업의 퇴거 위기 발생



개선 후

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융·복합 제품 판매가 가능해졌음

-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
 - ☞ 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(산업융합 신제품)으로 확대

추진과정



- '18. 12.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 발굴
- '19.~'22. 중앙부처 건의(10회)와 소통(32회), 기업과의 소통(67회) 추진
- '23. 5.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

개선효과



- 국내 융·복합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
- 융·복합의 핵심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관련 세계시장(1,578조 규모) 진출 기대

